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 대전지역 공약 분석

1. 취지 및 개요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18대국회의원총선거특별위원회(이하 '대전연대 총선평위')는 국회의원 총선거의 의미와 정책선거를 제고시키기 위해 대전지역의 현안 20개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각 정당의 후보들에게 각정책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한바 있다.

이와함께 각 정당의 후보들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매니페스토를 위해 제출한 공약을 분석하여 발표함으로써, 제18대 총선 막바지 혼탁한 선거문화를 정책중심의 선거로 만드는데 일조하고,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에 대한 비교검토를 통해 변별력을 갖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분석

1) 각 후보자 질의서 회신 여부 - 유권자 알권리 무시하는 후보자

대전연대 총선평위는 지난 4월 1일, 대전지역에 출마한 32명의 후보 중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연락처가 있는 후보 30명을 대상으로 이메일로 12개 분야 20개 항목의 대전지역 현안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했다. 그 결과 지난 4월 3일까지 응답한 후보는 13명(동구 : 선병렬, 이병구 후보, 대덕구 : 김영덕 후보, 서구갑 : 백운교 후보, 서구을 : 박범계, 유지혁 후보, 유성구 : 정병욱, 송병대, 조영재, 정만희 후보, 중구 : 권선택, 이현영 후보)에 불과했다.

<표1>대전지역 출마자들에게 발송한 질의서 내용

분야	요구안	분야	요구안
환경	금강운하를 포함한 한반도 운하 백지화	다문화	외국인 이주노동자 복지회관 설치
	녹지충량제 도입		다문화교육 의무화
	TKP 세천저유소 유류오염정화 및 생태계복원, 지역무상반환	교육	학교급식센터 설립
도시재생	충남도청 청사의 박물관화와 도청부지의 중앙공원 조성	균형발전	수도권규제완화반대,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정책 지속추진
과학기술	원자력연구소 주변지역 안전망 구축 및 대안 수립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특별시'의 차질없는 건설
보건·복지·인권	사전예방적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도시보건지소 설치확대	서민경제	대형마트 규제 법안 제정 및 동네시장 활성화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지역사무소 설치		교육비 가계부담 경감대책 마련
	의료공공성 강화 대책 마련	노동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철폐

	돌봄 노동의 사회적 지원 확대	도시교통	안전한 보행환경 확립
여성	여성을 포괄하는 사회안전망 구축과 빈곤여성 지원강화	문화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재추진

※ 응답자 답변 내용 중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밑줄 참조

이번 질의에 응답한 대부분의 후보들은 대전연대 총선평위가 제안한 지역현안과 관련하여 대부분 동의하였다. 가장 민감한 사안인 ‘금강운하를 포함한 한반도 운하 백지화’와 관련하여 한나라당 후보인 송병대 후보도 대전연대 총선평위가 제안한 내용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동구의 선별 후보는 TKP세천저유소 유류오염정화 및 생태계복원, 지역무상반환, 충남도청 청사의 박물관화와 도청부지의 중앙공원 조성, 원자력연구소 주변 지역 안전망 구축 및 대안수립과 관련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중구의 권선택 후보는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지역사무소 설치와 관련된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고, 유성구의 송병대 후보는 원자력연구소 주변지역 안전망 구축 및 대안수립의견에는 일부 의견만 동의하고, 사전예방적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도시보건지소 설치확대 의견에는 기준 완화시 찬성을, 돌봄여성의 사회적 지원 확대, 수도권 규제완화반대,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정책 지속추진, 안전한 보행환경 확립에 대해서는 일부 의견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전해 왔다.

그러나 이번 질의에 응답하지 않은 대부분의 후보들은 지난 4월 2일까지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당선권에 있는 후보들이 다수인 것으로 볼 때, 최근 일부 후보자들이 후보초청 토론회에 불참한데 이어 유권자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지역에 기반한 국회의원이란 지역의 의제와 관련하여 어떤 내용이 있고, 이에 대해 어떻게 의정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응답해주는 것이 지역구에 출마한 국회의원의 기본 자세라 할 수 있으나, 이번 응답결과를 보면 전혀 능동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 정책선거에 대해 이번 총선출마 유력후보자들은 미온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2) 주요 정당의 시당 공약 비교

대전연대 총선평위는 거대 3당인 통합민주당,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대전시당의 대전시 관련 공약에 대해 분석하였다.

<표2> 각 시당별 공약

통합민주당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세종시의 원활한 건설을 위한 입법 -대덕연구개발특구내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외국기업유치 -행정구역 개편을 통한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행정중심복합도시 차질없는 추진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주민참여형 원도심 활성화 -스파웰빙타운 설립	-차질없는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추진으로 대덕연구개발특구 활성화, 대전지역 경제 부흥 -정부안대로의 차질 없는 세종시 건설 -첨단의료산업단지 등 대형국책사업

-대전도시철도 1호선 연장, 대전-거제간 중부선 철도 건설 -대전1,2산업단지, 지식산업단지로 육성 -2009 대전국제우주회의 지원	-유성 중규모 물류 거점 조성 -중남부권 최대 드림시티파크 조성 -세계자동차박물관, 미래전시관 건립 -대전1,2산업단지 이전, 21세기형 첨단 산업과 문화단지 개발 -방재지휘센터 설립 -벤처기업 육성펀드 조성 -인쇄출판지식정보산업단지 조성 -구립 어학원 건립 -마을어린이도서관 건립지원방안 마련 -에듀케어 활성화 -대전순환고속도로 무료전환 추진 -자전거주차장확보 및 녹색교통제도화 -자전거 및 인라인 도로 조성 -대한민국 근·현대사 박물관 건립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기념관 건립 -원자력과학문화원 건립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 -3대 하천 체육공원조성 및 개보수 -중부권 원자력 의학원 건립	유치 총력 -서구 분구를 통한 선거구 중구 -대전역사를 민자역사로 건립, 역세권 개발전략 수립
---	--	--

이들 정당의 공약을 비교해보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지속적인 추진과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유치를 약속하고 있다. 또한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서구 분구(행정구역 개편)를 통한 선거구 중구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공당인 정당의 공약이지만 지방정부의 입장과 배치되거나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공약도 다수 눈에 띄었다. 통합민주당의 대전-거제간 중부선 철도 건설은 대표적인 환경훼손 공약이 될 수 있으며, 한나라당의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기념관 건립이나 원자력과학문화원 건립, 대전1,2산업단지 이전, 21세기 첨단 산업과 문화단지 개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의 공약은 이해관계에 따라 지역에서도 뜨거운 논란이 될 수 있는 공약이다.

3) 지역구별 후보 공약 비교 - 국회의원 공약이야, 대전시장 공약이야?

(1) 동구

대전광역시 동구에 출마한 후보는 통합민주당 선병렬, 한나라당 윤석만, 자유선진당 임영호, 민주노동당 이병구, 평화통일가정당 신기영 후보 등 5명이다. 이들 후보들이 주장하는 공약을 구분해보면 보건·복지·의료 분야의 공약이 8개, 경제 및 도시개발분야의 공약이 각각 5개, 교육이 3개, 고용안정, 국토개발과 관련된 공약이 각각 1개이고, 기타공약이 1개다.

특히 선병렬, 윤석만, 임영호 후보는 공공병원 건립을 공약화 했다. 임영호 후보의 공약 중 지하철 2호선 용전동 터미널 연계 공약은 현재 대전시가 재정문제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공약으로

선심성 공약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2) 대덕구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출마한 후보는 통합민주당 김원웅, 한나라당 이창섭, 자유선진당 김창수, 민주노동당 김영덕, 평화통일가정당의 최효정 후보 등 5명이다. 이들 후보들이 주장하는 공약을 구분해 보면 도시교통 2개, 도시개발 4개, 교육 5개, 경제 2개, 복지 4개, 고용 4개, 국토개발 1개, 기타 3개 등이다. 특히 공통된 분야로 도시개발, 교육, 복지, 고용관련 공약이 높은데, 이는 대덕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도시환경과 교육환경, 복지환경이 열악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각 후보들의 공약 중 김원웅 후보와 김창수 후보가 공통으로 주장하는 내용은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된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대전시의 입장과도 배치되고 있어 실현가능성이 낮은 공약이다. 또한 김원웅 후보와 이창섭 후보가 1,2산업단지와 관련한 내용을 공약으로 발표했으나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실현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특히 일부 후보의 공약중 구호성 공약마저 남발하고 있어 정책선거를 무색케 하고 있다.

(3) 서구 갑

대전광역시 서구 갑에 출마한 후보들은 통합민주당 박병석, 한나라당 한기온, 자유선진당 백운교, 친박연대 이영규, 평화통일가정당의 길준구 후보 등 5명이다. 이들 후보들의 공약 중 박병석, 한기온, 백운교, 이영규 후보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공통된 공약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박병석 의원은 서구 내에 첨단산업단지 조성, 한기온, 이영규 후보는 기성동에 첨단산업단지 도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교육분야에서는 한기온, 이영규 후보가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를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4) 서구 을

대전광역시 서구 을에 출마한 후보들은 통합민주당 박범계, 한나라당 나경수, 자유선진당 이재선, 친박연대 서종환, 평화통일가정당 길준구, 무소속 이세운 후보 등 6명이다. 서구 을에 출마한 후보들의 공약은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하드웨어적인 것에서 탈피한 모습이 많이 보인다.

특히 교육과 관련한 공약이 7개로 가장 많았고, 학교 및 지역의 안전과 관련한 공약도 3개나 된다. 특히 나경수 후보의 학교급식법 개정과 투명사회협약체결 공약은 그 동안 지역에서 달성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으로 의미있는 공약으로 보여진다.

(5) 유성구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출마한 후보들은 통합민주당 정병욱, 한나라당 송병대, 자유선진당 이상민, 친박연대 조영재, 평화통일가정당 정만희, 무소속 이병령 후보 등 6명이다. 유성의 지역적 특색이 국가산업단지인 대덕연구단지 및 이 지역을 포함한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모든 후보들은 과학과 관련된 공약

을 내걸고 있다.

특이한 점은 유성이 온천의 도시란 점을 볼 때 관광과 관련된 공약을 제시할법도 한데 관광관련 공약을제시한 후보는 정병옥, 송병대 후보 두명에 불과하다. 또한 원자력 관련 시설이 위치한 지역으로 최근에 관련 사건 사고가 많았음에도 이와 관련한 공약이 전혀 제시되지 않은것도 문제다.

(6) 중구

대전광역시 중구에는 통합민주당 유배근, 한나라당 강창희, 자유선진당 권선택, 평화통일가정당 이현영 후보가 출마하였다.

유배근 후보의 보문산 관광벨트화 공약, 강창희 후보의 중남부권 최대 드림시티파크 조성 공약, 권선택 후보의 보문산을 전국민이 찾는 관광명소화 공약은 현재도 개발의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 보문산에 대한 개발압력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 또한 유배근 후보의 유등천도시고속도로 건설 공약은 이미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다.

대체로 중구에 출마한 후보들의 공약은 보문산을 중심으로 지나친 개발 압력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데다, 재원조달 가능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해볼때 공약이행의 구체성은 낮아 보인다.

3. 총평

대전지역에 출마한 32명의 후보들에 대한 공약을 분석하였다. 이들 후보들의 공약은 기존 대전광역시나 자치구의 정책을 자신의 공약으로 반영한 예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가 실현여부를 유보시킨 정책에 대해 실현하겠다고 공약화한 경우도 있었다. 지역의 유권자들이 후보들에게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약을 요구하고,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함으로써 후보자들을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각 후보자 및 정당의 공약을 분석하면서 다음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아직도 유권자 알권리를 무시하고 유권자위에 군림하고 있다.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태도는 겉으로는 유권자를 극진히 대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유권자들의 알권리는 무시하는 경향이 크다. 최근 일부 후보가 텔레비전후보초청 토론회에 불참하는데 그치지 않고 정책질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반이상이 무응답으로 일관한 것은 여전히 유권자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둘째, 주요공약이 대전시장 공약인지 국회의원 공약인지 불분명하다.

입법기관의 일꾼을 뽑는 국회의원선거가 아무리 지역민을 대표한다하지만 대부분의 국회의원 후보들이 제시하는 주요공약은 대규모 개발공약이 주를 이루며, 천문학적인 재원이 소요되는 국책프로젝트 성격을 갖는

것도 다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도시철도 노선과 보문산 개발프로젝트 처럼 심지어 지방정부와의 조율이나 정부와도 조율해야 하는 대규모 개발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헛공약이 될 가능성은 물론 유권자들 스스로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공약이다.

셋째, 사회적 약자는 허울 뿐, 대부분은 개발공약만 나열.

전체적으로 도시개발, 복지, 교육 등의 분야에 대한 후보들의 공약이 많았다. 대덕구의 경우 가장 첨예한 문제인 1,2산업단지와 관련된 공약에 있어 구체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고, 서구 갑의 출마자들은 도시철도 2호선 문제에 대해 약속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검토와 대전 시민 전체의 논의가 전제되어야 할 내용이다. 32명이 발표한 공약 중 보전에 대한 공약, 여성에 대한 공약은 단 한건도 없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소수자인 장애인에 대한 공약도 커다란 정책적 틀에서 구상하는 후보는 단 한명도 없었다. 그러나 노인, 여성,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부문 확대를 공약화한 후보는 소수였다. 국가의 시스템 자체는 복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대전지역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내세운 공약은 여전히 개발 중심의 공약이다.

넷째, 입법부의 일꾼을 뽑는 선거에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입법경쟁이 없다. 시,구의원 뽑나?

시의원, 구의원 뽑는 선거가 분명 아님에도 불구하고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역할에 부합하는 국민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한 입법계획을 공약화하는 후보는 거의 없었다.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수많은 입법관련 의정활동을 해야할 막중한 권한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관련공약이 전무하다는 것은 부끄러운 국회의원선거의 자화상이다. 특히,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제시한 공약가운데 상당수가 자치단체장이 제시했던 공약이나 이미 지역현안으로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이 공약으로 제시된 경우도 대부분이었다.

다섯째, 정치,경제,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위한 고민이 부족하다.

각종 대규모 개발공약이 난무하는 가운데, 정작 국회에서 다뤄야 하는 지방의원 정당공천문제나 지방자치제도개선 문제, 정보공개법 개정 문제,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약,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공약 등의 정치, 행정, 사회적인 현안에 대한 공약제시도 거의 부재했다. 이런 문제는 국회내 입법활동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과제라는 점에서도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각성도 필요하지만, 유권자들의 새로운 관점도 절실히 요청되고 후보선택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